

고흥 굴 양식장,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강제출국 시도

인권단체 “구속 수사해야”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임금착취와 폭언 등 인권침해로 고발된 브로커와 고용주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30여 명을 본국으로 강제 출국시키려다 제지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단체들은 “조사 회피와 증거인멸을 위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강하게 규탄하며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5개 인권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새벽 1시께 브로커와 고용주가 필리핀 노동자들을 관공버스에 태워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노동자들의 신고와 단체의 제지로 출국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는 노동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불법적 강제행위이자, 수사기관의 조사망을 피하려는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라며 “수사와 행정조치가 지연되자 피고발인들이 핵심 피해자들을 서둘러 출국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굴 양식장 인권유린 사건은 지난 2월 24일 필리핀 노동자 한 명이 숙소로 탈출해 임금 미지급과 폭언 등을 폭로한 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와 브로커를 고발한 지 보름 만에 벌어졌다.

고흥군의 현장조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피해자 탈출 다음날 조사에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0여 개 단체는 4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나서 'CCTV' 인권침해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조사 장소가 실제 피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숙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들은 “고흥군 담당자의 묵인이나 직무유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행정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인식하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고흥군은 문제를 축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전남 인권단 등은 지난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28·여)씨가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양식장 관계자 2명과 불법 중개업자 4명을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단체는 “A씨가 지난해 11월 E-8 어업

계절노동자로 입국했지만 약속된 월급 209만원 대신 첫 달 임금으로 23만5000원만 지급받았다”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과 계약의 작업 동원, 열악한 숙소 환경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흥군 한 굴 양식장의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

전남·광주 통합교육 비전 시도민과 함께 만든다

전남교육청, '통합 교육비전위원회' 추진 100여 명 공개모집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 교육 정책을 발굴·제시하는 '가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교육비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16일까지 전남·광주 시도민 위원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

교육비전위원회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통합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이자,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민주적 속의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약 100명 규모로 꾸러지며, 시도민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출한다. 신청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위원들은 오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속의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

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도출된 정책 의제와 위원들의 제안 사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 통합 논의를 확대하고, 시도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형' 교육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욱 정책기획과장은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집단 지성을 모아 통합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의 전문가가 함께 새로운 지역 교육 비전을 제시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성호 기자

밤낮 안 가린다... 전남경찰, 봄 행락철 음주운전 불시단속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22개 일선 경찰서와 함께 주 1회 이상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경찰서도 주 2회 이상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에는 교통경찰을 비롯해 기동대와 지역경찰도 투입한다. 각 지역 주요 지점

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봄철 지역 축제 개최 등으로 교통량과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쁜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영광서 50대 고독사... 광주·전남서 5년 사이 3배 급증

전남 영광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광주·전남에서 고독사 사례가 5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전남 영광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4분께 영광군 영광읍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지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현장에서 A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전 일용직 현장에서 일하며 홀

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범죄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고독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사망 일시를 조사 중이다.

A씨의 사례처럼 광주·전남에서 집계되는 고독사 건수는 5년 사이 3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20명(광주 382명·전남 738명)이 파악됐다.

광주시의 경우 2021년 44명에서 이듬해 57명으로 증가, 2023년 74명, 2024년 79명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28명으로 부쩍 늘었다.

전남도도 2021년 85명에서 이듬해 105명, 2023년 158명, 2024년과 2025년 6월 기준 각각 195명을 기록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집계에는 지역 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 광주지역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17.9%, 전남도는 32.4%에 달하고 있다.

지역내 일부 자치단체들은 유관기관과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면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는가 하면,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치르고고 있다.

광주지역 자치구 한 관계자는 “무연고자 사망자의 경우 위패를 모시거나 일련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장례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길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이밖에 여러 기관과 함께 고독사 예방 정책도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전공무원노조 광주·전남교육청지부는 교육행정 통합과 관련해 시·도교육감에게 근무 여건 개선과 조직 간 갈등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교육행정의 경우 일반 행정과 달리 자체 세입이 없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과 인력 감축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광역도시권인 광주와 농어촌지역

광주·전남 교육청노조 “교육통합 조직 간 갈등 우려”

인 전남의 이질적인 두 교육청이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통합 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통합추진단 내에 노조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

다고 요구했다.

임미진 광주교육청 지부장은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지방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신상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관할구역 간 강제 전보를 원천 차단하고 실

질적인 본인 동의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성남 전남교육청 지부장은 “노조는 통합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전남과 광주 학생들이 더 행복한 교육과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코레일, 지난해 87만명 임산부·다자녀 열차 할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열차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은 이용객은 전년 41만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7만명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임산부에게 열차 운임을 40% 할인하는 ‘맘편한 코레일’은 지난해 58만3000명이 이용했으며 총 할인 금액은 7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19만7000명(26억원 할인)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맘편한 코레일’은 임산부와 동반 1인에 모든 열차 일반실 운임의 4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KTX 특실(우등실)을 일반실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업그레이드 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2자녀 이상 가족이 함께 타면 KTX 운임을 최대 50% 할인하는 ‘다자녀 행복’은 28만4000명이 이용, 41억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객은 전년 20만

9000명(29억원 할인)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다자녀 행복’은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회원이 가족 3인 이상(어른 1명 포함) 함께 이용할 경우 KTX 운임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2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할인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 마케팅 단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는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